



편집자의 말

『아시아리뷰』 3권 2호(통권 6호) 발간에 붙여

안청시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

『아시아리뷰』 이번 호에는 편집진에서 기획, 선별한 3편의 역사·문화 관련 논문과 지역연구의 쟁점과 현황에 대한 논문 3편 등 6편의 기획·연구 논문과 연구여행기 1편, 그리고 2편의 서평을 실었다.

먼저 한상일의 글 “지식인과 ‘신념의 전통’: 《세카이》와 한반도 문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연례 아시아포럼(2013/11/14)에서 한 교수가 발제한 강연록을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최희식과 김형중, 오윤아, 이난아 등 4편의 글은 2013년 하반기(2013/11/22)에 『아시아리뷰』 편집위원회가 주관한 국내 학술회의 ‘아시아지역·주제연구의 쟁점과 현황’에서 발표 및 토론회를 거친 후 필자들이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연구논문들이다. 지양뱌웨이(江柏燁)의 논문 “변경과 과정: 동아시아 시선 속의 진먼 지역사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동북아센터)가 주최한 국제 콜로키움 논문집, 『경계에서 보는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2013/9/27)에 수록된 중국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문이다.

안청시의 글 “동북아의 역사 갈등과 화해: 현장답사기”는 2013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기획, 주관한 ‘열린강연’ 시리즈 “아시아시대, 중심을 가다”의 제3회 주제 ‘아시아, 분쟁과 화해의 현장을 가다’(동북아 편)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필자가 책임 집필한 현장답사 기록(field research report)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서평에서는 이근 외 저,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201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대하여 권혁욱이 쓰고, 조영남 저 『중국의 꿈: 시진

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2013, 민음사)에 대하여는 전성홍이 기고해 주었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연구논문 6편을 중심으로 요약 소개 및 간단한 해설을 편집자의 글로 대신하기로 한다.

II.

한상일 교수는 국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일본 정치를 교수한 원로 정치학자로 은퇴 후 한일관계를 둘러싼 지성사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오면서 근자에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세카이(世界)》와 한반도』(2008, 기파랑), 『1910, 일본의 한국병탄』(2010, 기파랑) 등의 저서와, 역서 『무지의 만용』(*The Valor of Ignorance*, 2012, 기파랑) 등을 연이어 출간했다. 이번 호에 실린 글의 서두에서 한 교수는 지식인의 ‘사회적 기능’은 지식인들이 각자 속한 지적 분야와 각자의 “영역에서 ‘신념의 전통’을 이어가고, 설명하고, 수정하고, 그것을 공통의 문화로 전환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편자는 지식인에 대한 한 교수의 견해를 좀 더 넓게 이해하여 지식인에게는 ‘전통’과 ‘신조(信條)’를 단순히 이어가고 전수하고, 수정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넘어 한층 더 높은 지적, 도덕적 차원의 잣대로 검증이 필요한 윤리적 책무가 부여된다고 본다. 지식인에게는 과거와 현재에 내재되어 있는 신념의 전통을 새로운 공동체 가치와 공통의 문화자원으로 ‘수정’ 또는 ‘전환’하며, 이를 사회 전반으로 재확산하거나, 시대적 요청과 과제에 부응하여 새로운 ‘신념 전통’을 선도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주고 전수하는 실천적, 도덕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다. 이 점에서 지식인 집단은 그 특수한 임무에 따르는 진실 담지자 또는 여론 형성과 선도 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책무를 다해야 하며, 그에 따라 대중의 감시와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관용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한 교수는 이 글에서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의 중심체라고도 할 수 있는 월간지 『세카이』가 한반도 문제에서 어떠한 ‘신념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는가를 찾아보고, 그 내용과 여파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카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폐허처럼 황량한 일본의 지성인계에서 ‘민족적 불

행과 패전의 굴욕'을 반추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과 국가재건을 위한 도덕 창달이란 가치를 내걸고 결집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언론매체로 1946년에 창간된 월간 종합잡지의 표제다. 『세카이』는 - 지금은 그 힘이 크게 쇠락했지만 - 창간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계열과 "전후 일본 문화계의 지적 경향이나 담론 형성, 또는 여론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한상일, 2008: 5 인용). 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지식계의 '진보적 중심체'로서의 『세카이』는 "초창기에는 일본의 전전(戰前) 현상에 대한 자기반성, 사회정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논조의 공정성을 담보로 한" 담론 매체로 출발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는 일본에서 한반도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취급한 대표적인 언론매체로 그 기초를 바꾸어 갔다. 일본의 전후체제가 1950년대에 들어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을 찾아간 데 반하여 같은 시기 한국은 남북한으로 갈려 각자 다른 길을 가며 동족 간 전쟁과 분단 이후의 대치 국면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혼란 상황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교수에 의하면, 『세카이』의 진보 지식인 매체로서의 기능이 점차 초기의 논리적, 객관적, 이성적 담론 담지자로서의 기능과 임무 면에서 이탈하여 다분히 왜곡된 논조로 한반도를 그려내기 시작했다고 다음과 같이 축약했다.

먼저 『세카이』의 성격과 창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창간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관계의 논문, 인터뷰, 여행기, 좌담회 등의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는 『세카이』와 진보적 지식인들은 남한을 '퇴화하는 나라', 북한을 '지상의 낙원'이라는 오류와 편견을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신념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음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 글 첫 절에서 일본 지식인계의 한국관은 '두 개의 시선'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 하나는 한반도와 한국을 '개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를 일본의 방어와 안전에 최전선 요체로 바라보는 '이익선의 대상'으로서 보는 관점이다. 한국병탄과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 보수 지식인, 정치권의 주도하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시선은 전후 일본 지식인들이 가진 한국관에도 여전히 자리잡고 있으며, 이 경향은

『세카이』의 논조들의 바탕에도 여전히 깊게 깔려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카이』의 논조는 1950년대 말까지는 일본사회의 “진로에 역점을 두고” 격변 속의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논조의 방향이 점차 마르크시즘에 경도되어 반미, 반자민당, 친사회주의 노선으로 선회하고, 미·일안보주의 폐기, 중국의 문화대혁명 지지,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협조하는 일본의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이즈음 『세카이』는 한국전쟁 3년, 뒤이은 한·일조약과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 등으로 눈을 돌려 일련의 논제로 다루었으며, 이후 한반도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들을 다루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세카이』의 한국 관련 논조는 친북한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 논제들에서 반남친북(反南親北) 기조를 펴나갔다. 이후 『세카이』는 한국의 ‘인권’, ‘도덕’, ‘평화’,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한국정부 타도’, ‘김일성 대변’으로 일관하는 ‘비이성적’, ‘편향적’ 보도와 많은 ‘오류와 편견을 드러냈다’고 한 교수는 밝혔다(본지 18-19면 참조).

한 교수의 분석을 음미해 보건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카이』 보도의 오류, 편견, 빗나간 판단은 『세카이』가 그 창간정신으로 내세운 일본 진보 지식인계의 신조와 임무를 배반했다. 창간 후 한반도에 대한 첫 기사에서부터 『세카이』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를 긍정’하는 신조를 깔고 시작했다(한상일, 2008: 32-40). 그 이후로도 한반도는 ‘혼돈의 숲’, ‘어두운 한국’으로 그려졌으며, 계속하여 ‘반남친북’(1960년대), ‘한국 타도’(1970년대), ‘반체제 세력과 연대’(1980년대) 등의 기치하에 반한(反韓) 논조로 이어져갔다(한상일, 2008: 1-5장 참조). 『세카이』의 한반도 관련 논조와 보도 내용은 ‘오만과 편견의 회로’처럼 진실 검증이 생략되고, 이웃에 대한 책임윤리가 간과된 상상의 허구에서 도출된 이상향, 아니면 식민지 제국주의적 우월감의 소산에서 비롯된 병폐적 자기 확신의 폭로처럼 되어 버렸다. 그 결과는 일본인 다수에게는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한·일 두 나라의 국민 교류에도 ‘부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한 교수의 글은 진실 담지자, 이성적 소통과 윤리적 담론 주체로서의 『세카이』는 일본의 진보 지식인계 대표주자로서는 유독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감정에 치우친 ‘가치 판단’에 편향되어 왔으며, 이웃한 상대국에 대한 ‘배려와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적절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세카이』의 보도는 남북한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일 두 민족의 화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두 나라 사회가 서로 ‘일그러진 과거’의 거울로 마주보듯, 마치 서로 노려보는 두 마리의 성난 투우의 모습처럼 소외, 불신, 갈등으로 점철된 상호 이미지 속에 가두어진 전후사(前後史)의 실패에 대해서도 면책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일본의 복고주의 풍조와 극우익정권이 대두하면서 한일관계가 유례없이 냉각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일본과 한국의 진보계 지식인 그룹은 온전한 이웃으로서의 상호배려를 통해 오해를 지우고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과 화해와 포용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나라와 민족, 국민 수준에서,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공히 한일 양국은 서로 간에 불신과 오해와 왜곡으로 인한 상호 질시와 갈등을 화해하고, 일그러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무너지는 화해 정신과 상실되어 가는 공유 가치를 복원·증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는 노력을 같이 경주해야 한다.

최희식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는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심화되고 있는 한·일 간 독도 문제와 중·일 간의 센카쿠 제도 영유권과 해양·영토 문제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 관리의 경과와 특징에 대하여 비교·고찰하였다. 국교정상화 이래 2010~2012년 중·일 센카쿠 갈등과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 및 2012년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일, 중·일 정부는 영유권 문제의 갈등을 ‘불안정한 상태’로 일단 접어두고 양자 관계의 호혜와 상호의존성 증진책을 우선시하여 독도 및 센카쿠 열도 문제가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평화적 관리 방식’을 공유했다. 이 방식이 지속되는 동안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것을,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지배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한국과 일본은 이 ‘암묵적 실효지배’ 이상의 현상 변경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과 관례를 적용하여 한·일, 일·중 양자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며 영유권 문제가 양국 간 긴장요인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자제해 왔다. 동시에 관련국들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 주변의 자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불안정한 영토 문제’는 일단 해결을 접어둔 채 이익 공유의 방식에 의한 조정외교에 노력해 왔다. 최 교수는 이러한 ‘잠정적 방식’은 “영유권 문제와 자원 이용 문제를 분리한 영토 분쟁의 해결방식”이며, 영토 문제를 무력 해결책에 의존하는 ‘근대형’(구시대적인) 영토 문제 해결 방식과 구분했다. 이러한 분쟁 관리 방식은 영토와 해양 분쟁에 대하여 “상호의존성의 원칙과 이해관계 조정 관행에 따라 이른바 ‘탈근대성’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본지, 58면).

해양 및 영토 분쟁은 영유권 문제, 어업 문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확정 문제와 동중국해 가스유전과 같은 해양자원 개발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 교수는 관계 당사국들이 이들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려 했는지를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논하였다. 어업 문제에서는 당사국들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 주변을 공동수역 또는 잠정수역으로 설정하여 상호합의의 조화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대륙붕 문제는 경계를 확정하지 않고, 해양자원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시도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했으며, 중·일은 1970년대부터 교섭을 시도해 오다가 2008년에야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최근 센카쿠열도 분쟁의 과열화로 말미암아 평화적 관리 방식은 일견 와해되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이래 근 반세기 동안 외교적 방식을 통해 영토 분쟁과 해양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던 한·중·일 3국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최 교수는 내다본다. 평화적 관리 방식은 ‘불안정한 평화’이기에 사태가 악화되면 더욱 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과 무력충돌이란 상호 ‘파멸적 귀결을 피하고자 하는 한’ 평화적 관리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양뵈웨이의 논문 “변경(邊界)와 과정(跨界): 동아시아 시선 속의 진먼(金門) 지역사(區域史) 연구”는 한국학계에 다소 생소한 진먼학을 소개하는 데 유익한 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는 흔히 금문도로 알려진 진먼은 14세기 후반 이래로 중국의 해안 방어 전략 요지였다. 1949년부터 1992년까지 국공대치, 냉전 구도의 전방기지(前線基地)가 되어 이 사회와 공간은 고도로 군사화되었다. 2001

년부터 진샤-진취안(金廈-金泉) 정기 항공편이 운항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진먼은 새로운 교통의 거점(节点)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논문은 진먼 지역에 관한 최근 20년간의 연구 업적을 분석, 소개하고 진먼 학이 인문사회와 타이완 역사 연구 영역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한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첫째, 진먼은 초기 타이완 이민의 원적지 중 하나로 이주와 개간의 사회적 변화로부터 대항해(大航海)시대의 거점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변화를 겪었다. 명·청 시기에 발간된 지방지와 편저작에는 진먼의 주체성이 부각되었고, 국가와 지방의 대족(大族: 명문 대가/거족)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진먼이 남긴 무형, 유형의 문화재는 건축사, 종교 연구, 지방풍속 연구의 중요한 현장이 되고 있다.

둘째, 근대 이래 진먼에서 경계를 넘어 유동하는 사회집단, 자본 및 문화전파의 현상 그리고 교향(僑鄉: 화교의 집거지)사회, 화교가족 및 해외회관(會館) 연구 영역의 전개를 분석, 소개한다.

셋째, 1949년 이후 냉전의 섬으로서 진먼의 사회형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근대 역사 초기(晩近) '탈군사회' 기록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진먼의 지역연구와 지역사, 국족사(ethnic-national history), 세계사를 연계시켜가면서 다학문 간 대화와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진먼 연구의 발전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진먼 연구가 타이완 연구와 식민지사의 연구 지평을 넓히고 심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일제시대 군 위안부 문제와 전쟁 성매매에 대한 비교연구에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III.

김형종의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은 한국학계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실적이,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의 정치·경제적 비중과 상호의존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연구 프로젝트 등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출

간된 연구 업적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망라해서 분석, 정리한 김 교수의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학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주제로 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 배경에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의 증가, 한류의 확산 등을 계기로 하여 추동된 것으로 보았다.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준공용어로 널리 통용되며, 대학 등의 교육·연구 인프라 면에서 연구 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는 점도 말레이시아 연구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연구의 심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핵심 연구자들 간 ‘분절화된 연구그룹화’를 보완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계 간 연구자를 포괄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후진 연구자 양성책에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김형중의 논문은 국내의 말레이시아 연구의 동향과 업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림과 표로 알기 쉽게 보여준다. 그리고 참고문헌에서 그 동안 국내에 축적된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들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어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사를 추적,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미얀마 연구 동향”에서 오윤아는 한국의 미얀마 연구가 최근까지 동남아 연구 중에서도 그 역사가 일천하고, 사회적 관심의 부족과 척박한 연구 환경으로 인해 전문 연구자 규모, 가용 자원, 연구 실적 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2011년 미얀마에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얀마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급증하고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 분야 연구도 큰 발전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망한다. 기존의 미얀마 연구를 분석해 보면 다른 동남아 지역연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연구실적 규모가 작고 주전공자가 극히 소수이며, 정치·국제관계 분야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미얀마 연구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정치·국제관계 이외에도 역사, 문화 등 여러 기초 분야로 연구 영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며, 극히 좁은 연구자의 풀(pool)이 넓혀질 수 있도록 양적·질적으로 준비된 인적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일이 긴요하다. 이윗하는 다른 동남아 나라들에 비해서 미얀마에 대하여 단행본으로 나온 연구저

서들이 드물고 연구 주제들도 개설서 수준이 많고, 미얀마 관련 근래의 정치 사정이나 최근의 개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 인력 양성과 보다 수준 높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위의 지원책에 더하여, 한국 내에 미얀마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학과가 유일하게 지방대학 한 곳에만 개설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난아는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와 번역 현황 고찰”에서, 한국과 터키 간에는 1972년에 ‘문화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터키어 과가, 1989년에는 앙카라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됨으로써 먼저 대학 차원에서 양국 학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학과들은 한·터키 양국 간 학술 분야 및 문학 분야 교육과 교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양국 사회에 문학의 보급과 교육도 이에 따라 점차 증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단일 작가의 문학작품이나 소수의 주제 및 문학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편파성이 높은 편이다.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연구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차세대 연구자 교육과 양성을 위해 터키문학사 관련 저서와 혹은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집필한 터키문학사 번역 발행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터키문학이 한국 문단과 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은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의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그의 작품이 한국에 소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터키문학 번역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학술지에 터키 작가들의 작품이나 작품 세계를 다루는 전문 연구와 연구 인력의 확장이 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터키문학의 번역이 활성화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문학에 대한 연구 환경 개선과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는 특히 세계 문학의 중심부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터키문학 연구에 대한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며,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학제 간 연구 역시 강화되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한다.

참고문헌

한상일. 2008.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세카이(世界)》와 한반도』. 기파랑.

2013년 12월